

'강통전세' 우려 보장보험 보완 시급

전세가율+대출금율=102.5%... 가입률 급증 불구 전체 비해 턱없이 적어... 비싼 보험료·임대인 동의 등 걸림돌

최근 '강통 전세' 우려로 전세금 보장 보험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74.1%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률 28.4%를 더하면 102.5%에 달한다.

전세 가격과 대출금 합산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속칭 '강통 전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만으로는 임차보증금의 보호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보증 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SGI)과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각각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운영 중이다.

10일 SGI에 따르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가입 및 실적은 올해 1분기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가입 건수 4697건, 가입 금액 7784억7200만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60%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3년 9월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보호상품'도 올해 1분기 가입 건수만 40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5건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통전세로부터 급속같은 전세금을 지키려는 임차인들이 급증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세가구 수가 376만16390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트렁크의 변신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서울오토살롱을 찾은 시민들이 튜닝된 자동차와 카오디오를 살펴보고 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40.5%)'을 꼽았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보증료율은 아파트 0.192%, 아파트 이외의 주택 0.218%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전세금 4억원에 2년 계약했다면 153만6000원(4억원×2년×0.192%)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은 0.15%로 SGI 보험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차인 중 절반 가량(49.5%)이 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꼽았을 정도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취득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전세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은 "전세금 반환보증 금융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거나 해당 보험상품이 시판 중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경 서울시 주택정책과 팀장은 "SGI 보험의 경우 비아파트 보험료율이 높다"며 "보험료 감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금보장보험도 의무가 입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의탁 SGI 마케팅 팀장은 "임차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진수 기자

다음달 하반기 금융권 공채 '한파'

5대 은행 1000명 안팎 채용 전망... 지난해 비 30% 감소

금융권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채용 한파가 금융권에도 이어져 입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대 은행의 하반기 일반 정규직 채용 규모는 지난해(1500여명)보다 30%가량 감소한 10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00명 규모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연간 채용 규모는 1200여명 줄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240여명, 200여명의 일반 정규직을 하반기에 뽑을 계획이다.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아직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KEB하나은행은 인력 재배치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350명)보다 적은 인원을 뽑을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의 사정은 더 나쁘다. 이들 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의 여

파로 정원을 5~10% 줄이는 내용의 해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산은과 수은은 지난해 각각 70명, 42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채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PFG기업은행도 지난해 하반기 채용 인원(약 200명)보다 줄일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도 가뭄점 수수료 인하 등 업황이 좋지 않아 채용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든 규모로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40여명, 국민카드 50명 안팎, 현대카드 30명 안팎, 케이탈·라이프 등 통합채용으로 70~80명을 뽑아왔다.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보험업계는 지난해와 비슷한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현재 하반기 채용이 예정돼 있는 곳은 한화생명(50명), 동부화재(35명), 롯데손해보험(17명), 코리아리(12명), 한화손해보험(10명), DGB생명(10명 이내) 등이다. /안진수 기자

30년 현대증권 역사의 뒤안길로

KB금융, 현대·KB투자 통합사명 'KB증권' 확정 발표

증권업계의 명가로 불리며 30년을 호령해온 현대증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1일 KB금융지주는 지난달 1일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현대증권과 기존 계열사인 KB투자증권의 향후 통합사명을 'KB증권'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8월 대구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국내 증시는 곤두박질쳤고 바이코리아 펀드의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이후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진 여파로 현대 금융 3사(현대투자증권·현대투자은행·현대증권)를 둘러싼 매각이 화두가 됐다. 현대그룹은 현대투자증권과 현대투자은행을 2004년 미국 푸르덴셜금융에 매각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자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증권을 팔겠다고 2013년 12월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현대증권을 둘러싼 매각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졌다. 2013년 현대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지만 두 달 만에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의 매각을 공식 발표

했다. 현대증권은 1962년 국일증권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후 1977년 현대그룹이 인수하면서 1986년부터 31년째 '현대증권'의 사명을 사용했다. 의환위가 직후인 1999년 바이코리아(Buy Korea) 펀드를 출시해 12조원을 끌어모으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8월 대구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국내 증시는 곤두박질쳤고 바이코리아 펀드의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이후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진 여파로 현대 금융 3사(현대투자증권·현대투자은행·현대증권)를 둘러싼 매각이 화두가 됐다. 현대그룹은 현대투자증권과 현대투자은행을 2004년 미국 푸르덴셜금융에 매각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자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증권을 팔겠다고 2013년 12월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현대증권을 둘러싼 매각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졌다. 2013년 현대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지만 두 달 만에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의 매각을 공식 발표

금융상품 가입~해지까지 온라인 처리 추진

금감원, 금융거래 서식·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자료에 도표·이미지 등 활용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거래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품 가입 설명자료에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한다. 금감원은 협회, 금융회사와 함께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 등 권역별 TF를 구성해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이

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을 확대한다. 금융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함에 증명서 발급이나 계약내용 변경·해지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상당해 거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3분기 중으로 온라인 발급 불가 증명서의 종류를 전수조사해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기시간이 긴 창구 서비스는 예약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한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 시간, 내용, 방문 영업점 등을 미리 예약하고, 대기하는 동안에는 고객이 태블릿 PC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열람하거나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가입시 다양한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온라인·오프라인 채널간 연계도 강화한다. 고객 동의를 받아 고객의 신상정보, 거래내역 상황 등을 일정기간(1개월)

동안 암호화해 저장하고, 영업점,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 본인 확인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한다. 금융상품 설명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상품 주요내용 설명서 소비자 이해를 위해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설명자료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설명자료의 중복되는 내용은 통·폐합한다. 개인정보 동의 등 금융거래 서식은 간소화한다. 소비자가 정보제공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으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안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